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한일 안보협력

이기태 ■ 통일연구원*

〈국문요약〉

1998년 성립된 김대중 정부의 새로운 대일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 자신의 대일 인식과 북한 핵위기로 촉발된 한반도 정세의 변화, 그리고 탈냉전 이후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의 변화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다. 특히 탈냉전 이후에도 국민 감정상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북한 위협은 한일 양국의 안보 관련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들에게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한일 안보협력 분야를 포함시켰다.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안보협력 분야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한일 간 안보협력을 위한 '신뢰' 구축과 이에 기반한 한일 협력의 '제도화' 추구였다. 또한 한일 간 안보분야에서의 다자주의와 비전통 안보, 국제협력은 한일 양국 간에 한국의 대일 감정과 일본의 평화헌법이라는 국내계약 요인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진행 가능한 분야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한국의 대일 안보 협력은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한일 안보협력의 신뢰 구축과 제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다자주의 안보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비전통 안보 분야 등 국제협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주제어: 김대중,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한일 안보협력, 신뢰 구축, 한일협력의 제도화

I. 들어가며

한일 관계는 일반적으로 구체적 사건을 계기로 갈등과 협력의 변화를 나타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처한 구조적 요인이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중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E-mail: ktleekorea@kinu.or.kr)

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전자로는 이승만 라인 설정, 김대중 납치사건, 문세광 사건,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을 들 수 있고, 후자로는 냉전 체제와 냉전 체제의 종언, 미국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 북한의 핵개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냉전 체제 기간에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에 편입된 한일 양국은 각각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한일 관계 역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라는 구조적 제약 하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냉전의 종식이 된 1990년대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는 시점이었다.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냉전 체제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은 한국 정치의 민주화에 기여하였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증가하면서 냉전 체제 하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통합을 위한 이념으로서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1990년대 이후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냉전 동안 절대적 가치로 인식된 반공 이념을 보다 유연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1993년에는 장기간 이어온 군사정부 통치가 끝나고 문민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1998년에는 김대중 정부의 탄생으로 사상 처음으로 여야당 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운동세력 및 여론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정치지도자 역시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나타냈다(이상봉 2001, 76-77).

냉전 기간 동안 한일 간에는 미국을 공통의 동맹국으로 하면서 공산진영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안보협력의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과거사를 비롯한 한일 양국의 국내 여론은 한일 간 안보협력의 진전을 어렵게 만들었다. 냉전 이후에도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한일 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양국 간 정치적 갈등 관계는 한일 간 안보협력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에는 다양한 국방 교류 및 제도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대표적으로 2016년에 맺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일 간에 PKO 활동 등을 통한 국제 공헌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한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한일 간 안보협력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양 정상 간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간의 파트너십 공동선언(이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파생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기존 한일관계가 과거 청산이 없이는 미래지향도 없다는 '과거 청산을 통한 미래지향'을 추구했다면, 이 선언은 한일이 미래지향 관계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과거청산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면서 과거를 청산해 나간다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협력'을 추구하였다. 또한 그 때까지 양자관계로 한정했던 한일 관계를 광범위한 국

제관계 범주 내에서 재구축하려는 시도를 나타냈다. 기존 한일관계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양자 간 틀에서 논의되었으나, 향후 한일관계가 가지는 글로벌 차원의 역할에 주목하여 그 틀에서 한일관계의 재구축을 이룩하자는 것이었다(이성환 2003, 286-287).

본 연구에서는 1998년 당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포함된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공동선언의 배경이 되었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및 김대중 정부의 대일 안보 외교를 살펴보고자 한다.¹⁾ 그리고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한일 안보협력이 가지는 현재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전의 김대중 정부의 등장에 따른 대일정책의 변화와 북한 핵위기로 촉발한 안보위협 증가에 따른 한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 증대를 면밀히 검토한다. 둘째,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안보협력 분야의 내용이 한일 양자 간 안보협력과 다자간 안보협력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하고, 현재 한일 안보 협력에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향후 한일 안보협력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을 덧붙인다.

사실 2018년은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므로 한일 관계 개선의 전망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검토, 일제 강점 하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으로 한일 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안보적 측면에서도 2018년 10월초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기로 한 자위함에 '육일기' 계양을 둘러싼 갈등 끝에 해상자위대가 불참하였다. 12월에는 동해 상에서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의 레이더 조준 여부를 놓고 한일 간에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안보 분야에서 한일 협력 추진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였다.

이와 같이 한일 간 안보협력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20년 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표명한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것은 향후 한일 안보 협력을 위한 훌륭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여기에 있다.

1) 류상영(2011)은 김대중의 주요 저작과 어록을 통한 대일 인식과 전략을 분석하였고, 박명림·지상현(2009)은 김대중의 동아시아 인식과 구상을 분석하였다. 최희식(2016)과 토가시(冨樫 2017)는 전후 한일관계 및 안보협력 분야에서 김대중 시기의 대일 안보 외교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김아름(2017)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과 '북일 관계 개선'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II. 김대중 정부 탄생과 한일 안보협력의 배경

1. 한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 확대

냉전 시기에 한일 양국은 안보문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다. 무엇보다 일본은 소련을 가상적국으로 상정하였지만, 한국은 북한을 가상적국으로 설정한 별도의 군사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일 간 안보 관련성은 매우 희박했다. 간혹 안보 협력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어디까지나 미국을 매개로 한 매우 제한적, 간접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았다.

1990년대 북핵문제의 부상은 한반도 위기 상황이라는 국제환경 변화 속에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 필요성이 제고되었다. 북핵문제가 한일의 공동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한일 양국 정부는 공동 대처의 필요성을 느꼈다. 즉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안보협력을 의미했다. 이를 계기로 1990년대 이후 한일 양국 간에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안보 관련 구체적 교류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미일 및 한미 안보동맹의 양자간 관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삼자간 동맹, 즉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1995년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의 설립을 통한 북한 핵개발 저지는 한반도의 안전에 대한 3국 간의 공통적 이해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다(이성환 2003, 285).

1992년 한국은 국방백서에서 최초로 한일 간 군사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이에 호응해서 일본도 한일 간 군사협력의 추진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1994년에는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시작되었고, 이 회담에서 한일 국방장관의 연습함 상호방문이 이루어졌고, 실무자급 회담에서는 한일 간 국방협의 정례화가 이루어졌다.

1995년 방위청은 새로운 방위계획대상의 각의 결정을 앞두고 한일 간의 군사 교류는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정에 기여하며 한반도와 일본의 안보는 밀접히 관련되므로 미일, 한미 관계에 더불어 한일 간의 밀접한 관계 발전이 지역안정에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표명하였다(榑原 1995).

그 해 7월에는 한일의 외교, 국방 관계자가 도쿄에서 비밀리에 PKO 활동 관련 협력을 위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PKO 공동훈련 및 연수의 실시, 수송기 상호활용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외무성은 한일 간의 PKO 협력을 위한 협의는 “미묘한 양국 간 방위 교류 문제를 UN의 PKO로 타개하려는 것”으

로 ‘교류를 뛰어넘어 본격적인 안보협력’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産經新聞』 1995/09/26).

1997년 9월 신가이드라인의 책정에서도 한일 간의 투명성과 신뢰조성을 위한 상당한 정도의 협의가 있었다. 1997년 3월 서울에서, 그리고 5월에는 워싱턴에서 미국 국방성 차관보, 한국 국방부차관, 일본 방위청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방위계획, 한반도에서의 위기적 상황에서 예상되는 협력 범위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그 결과 1997년 6월 신가이드라인 중간보고가 발표되었을 때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신가이드라인에서 미일의 군사협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星 1997).

1996년 한일포럼은 미일 신가이드라인이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한일 안보협력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자위대의 한국 체류 일본인 구출 활동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논의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신가이드라인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의 주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소개를 위해 자위대가 항공기를 한국에 파견하는 경우 일본은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필요하다는 점에 참석자들이 공감하였다”는 점이다(최희식 2016). 신가이드라인 발표 직후인 1997년 9월 한국 정부는 외무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일본이 우리 영해나 영공에서 군사협력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정부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취하면서 조건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이는 1996년 한일포럼 내에서의 논의와 비슷했다. 최희식은 1998년 이전 김영삼 정부 시절에 개최된 한일포럼의 성명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전사(前史)로 위치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최희식 2016).

신가이드라인에서 ‘주변 유사’는 곧 ‘한반도 유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 사태시 신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했다. 그 결과 한일은 신가이드라인을 통해 합동군사작전 등 실질적 군사협력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1997년 여름, 한일은 최초로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의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였다(이성환 2003, 286).

2. 김대중 정부의 대일 정책과 한일 관계

1998년은 한국의 대외정책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사상 최초의 여야당 간

평화적 정권교체가 진행된 이후였다. 한국 내에서는 냉전 시기의 군부 독재와 1990년대 탈냉전 이후에도 계속된 보수 정부의 정책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과 함께 일본과는 1990년대 이후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여러 화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 구조가 계속되고 있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의혹에서 시작된 북핵 위기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악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에 최초의 여야당 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성립된 김대중 정부는 먼저 대북 정책의 변화를 추구했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 정책의 기본을 대립, 억지에서 공존, 협력으로 이동시켰고, 한국에 의한 북한의 '흡수 통일'을 부정하고 경제원조 및 협력을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 수교를 장려하기도 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대외정책에서 다자주의와 지역협력 구상을 추구했다. 다자주의의 모색은 냉전기에도 그리고 냉전 이후에도 나타나지만, 냉전기에도 한미 동맹과 미국의 대한 안보 강화는 다자주의의 기본 전제와 목적이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한미동맹을 상대화하는 다자주의와 지역협력비전을 내세웠다.

김대중 정부는 대일 정책에서도 이전 정부와 다르게 전향적인 태도와 인식을 보여줬다.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에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상대방의 강경자세를 초래하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²⁾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으려면 김영삼 정부 당시 악화되었던 대일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도 갖고 있었다(박영준 2015).

김대중 대통령 본인도 일본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와 다른 전향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김대중에게 일본은 아시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존재이면서 한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내정치와 과거사 문제 등 일본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아시아의 리더로 신뢰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김대중의 인식이다. 이와 같은 김대중의 인식은 철저하게 국제정치적 현실주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인권 등을 중시하는 정치적 원칙이나 민족주의는 그다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류상영 2011, 147).

2) 류상영은 김대중의 대일인식에는 개인적 경험이 많이 작용했음을 주장한다. 즉 김대중에게 일본은 매우 중요하고 친근한 국가였는데 김대중의 정치이념 및 활동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협력한 그의 친구가 가장 많은 국가도 일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김대중과의 개인적 인연이 가장 오래되었고, 정치인으로서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김대중과 연관된 수많은 사건이 발생한 국가도 바로 일본이었다. 그래서 김대중이 남긴 기록을 국가별로 분류해보면 일본에 관한 것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류상영 2011, 156).

당시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요한 국가임과 동시에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일본과 기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우호국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안전 보장 관점에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양국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한국과의 방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신뢰 관계를 증진시키고, 협력의 기반을 만들어서 양국이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정책 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을 중요시했다. 이러한 기본 인식 하에 일본 오부치 정부도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 한일 협력을 모색하였다. 오부치 수상은 취임 초부터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정책구상을 책정했는데 그 중에서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중국, 한국과의 관계를 ‘외교’에 그치지 않는 ‘린교(隣交)’라 규정하였다(「21世紀日本の構想」懇談会 2000, 第6章).

사실 냉전 이후 변화된 구조적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북 정책이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본이 대북 카드를 한국의 북방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였다(유석열 1997). 북한 핵문제 및 미사일 문제 등으로 북일 관계 개선은 지체되고 있었지만, 적어도 구조적 측면에서는 북일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남북교류와 평화공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일본이 선점하게 되는 경우를 가장 경계하였다. 왜냐하면 일본의 대북 접근은 북한의 대남 접근의 동기를 약화 내지는 중화시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일관계의 분쟁요인이 될 수도 있었다(이상봉 2001, 80-81).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정부레벨에서의 한일관계는 호전되어 우호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냉전 이후 국제정세가 명확해짐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 모두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한국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증대로 일본의 외교적 입지가 강화되었고, 여전히 한일 공동의 위협으로 간주되는 북한의 존재와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그리고 미일 간 신가이드라인 책정 등이 한일의 안보적 측면에서 상호이해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3. 일본의 대북 접근과 한일관계

일본은 냉전 붕괴 이후 구조적 측면에서 대북 접근이 용이해졌다. 전후 일본

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국에 대한 지지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라는 2가지 기본 방침에 입각해 왔다. 냉전 구조 속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지를 견지하면서도 정치보다는 비교적 덜 민감한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해 왔지만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 입장에서 북한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유일하게 국교를 수립하지 못한 국가라는 점에서 북한과의 수교는 일본의 전후처리의 종결을 의미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냉전의 종식과 한국의 북방정책에 따른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 분위기에서 일본은 1990년 9월 가네마루(金丸信) 자민당 부총재의 북한 방문을 이끌어냈다. 가네마루 방북단은 공동선언에서 북일관계 수립을 위한 공식 협상의 시작을 알렸으며, 가네마루는 식민통치에 따른 보상뿐만 아니라 전후 45년 동안의 손실도 보상할 것을 수락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시작된 북일 협상은 1992년 11월, 제8차 협상 이후 북한의 NPT 조약 준수 및 일본인 납치 문제로 중단되었다. 1994년 10월 핵문제에 관한 ‘북미기본합의’ 이후 북일 협상은 재개되었으나,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시험 등으로 다시 중단되었다. 일본은 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해 전후처리의 종결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북한도 체제유지를 위한 일본과의 교역과 자금이 필요했지만, 북일 간의 관계정상화는 한일관계, 미일관계 등 많은 문제가 남아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햇볕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유연하고 포용적인 접근법을 취했다. 과거에는 한국이 강경한 대북정책을 취하는 반면 일본은 북한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취해 한일 간의 불협화음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일본의 대북정책이 강경하게 변화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유연한 대북정책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조세영 2014, 225).

III.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한일 안보협력

1. 한일 양자 간 안보협력 모색

한국과 일본 간의 안보 협력은 냉전 구도 속에서 미국이라는 공통의 동맹국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협력의 소지가 많았지만, 양국의 여러 국내적 제약

으로 협력이 쉽지 않았다. 한국은 일제 식민지 지배에 따른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가로막았고, 일본은 국민들의 '안보 알레르기'와 평화헌법, 전수방위원칙 등 안보 차원의 제도적 한계, 그리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일 간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도 일본 방위청장관의 한국 방문은 국교정상화 이후 14년 만인 1979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성사되었고, 한국 국방부장관의 일본 방문은 1994년 4월에 처음으로 실현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북한 핵문제가 부상하면서 한일 간에도 안보 분야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졌다. 1991년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학교가 한국 유학생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등 안보 분야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1994년부터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과 국방 당국 간의 방위정책 실무회의가 해마다 개최되기 시작했다(조세영 2014, 224-225).

1990년대는 한국의 내셔널리즘이 분출하면서 대등한 한일 관계가 모색되고 있던 시기였다. 1990년대 전반에 북한 핵위기를 거쳐 책정된 1997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1998년 6월 처음으로 양국의 외교 당국과 국방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열렸다. 또한 오부치 수상과 김대중 대통령은 방위협력을 포함한 '한일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게다가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시험은 한일 양국이 안보 협력 필요성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 오부치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공통의 결의를 '한일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통해 발표하였다.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양국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종전보다 솔직한 태도를 한국측이 평가하는 차원에서 과거사 문제를 일단락 짓고, 상호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서 정상회담의 정례화, 일본수출입은행의 30억 달러 차관 제공, 각료 간 회의 개최, 지역안보를 위한 다자간 대화와 협력, 환경협력 강화, 일본문화 개방을 위한 전문가회의 구성을 발표하였다. 특히 한일 간 협력 어젠다의 하나로 안보 대화, 방위교류 확대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양국 간 과거의 역사적 경위를 넘어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침략과 지배 차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제로섬(zero sum)의 역사적 관계를 고려하면 한일 간 안보협력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한일 관계가 과거사에 구애받지 않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는 필요에 따라 한일 간 안보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이성환 2003, 287).

이처럼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안전보장에 관한 한일협력이 추가되면서 한일 안보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하다(최희식 2016, 213-214). 1990년대 이후 냉전의 종식에 따른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한일 간에 본격적인 안보교류가 시작되었다. 물론 공동 군사훈련과 같은 군사협력까지 발전하지 못 했지만, 냉전기와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탈냉전 이후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일 간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최희식 2016, 214).

무엇보다 이 시기에 한일 양국 간에 한 단계 더 높은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이 논의되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북한의 위협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한일의 현실 인식이었다. 또한 김대중 정부 출범이 당시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국방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일 안보협력을 필요로 하였다. 일본 입장에서도 북한이 현실적 위협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능력의 약화가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게 만든다는 인식에서 적극성을 가지게 되었다(이성환 2003, 287).

이러한 인식에서 1999년 1월 7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국방 당국 사이에서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핫라인을 개설하고, 한일 해군 간의 합동훈련 실시 및 일본 주변 긴급사태를 상정하여 대응책을 검토하는 '방위 중요사태대책회의'의 신설, 군 작전을 실질적으로 통괄하는 '군통합참모회'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동아일보』 1999/01/09).

보다 구체적인 한일 안보협력으로는 1998년 12월 한국 해군이 북한 잠수정을 격침한 이후, 국방부와 방위청 및 자위대 당국자 간의 핫라인이 설치되었다. 1999년 8월에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합정이 동중국해에서 공동 해난구조훈련(Search And Rescue Exercise: SAREX)을 실시하는 등 안보 협력 분야에서 착실하게 실적을 축적해 나갔다.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전후로 한일 간에는 장관급, 실무 국장급, 작전부대간 중층적인 교류와 공동훈련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미 1994년 이후 한일 양국 국방장관은 거의 매년 상호 방문해서 회담을 열고 있었는데 1998년 9월 1일, 일본을 방문한 천용택 국방장관은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방위청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북한 대포동 미사일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하였고, 해군과 해상자위대 간에 재해구조를 위한 공동훈련 실시를 합의하였다. 이러

한 합의 결과 1999년 8월, 일본 규슈 및 한국 해역에서 해군 함정 2척과 해상자위대 호위함 3척이 참가하는 최초의 수색구조 공동훈련이 실시되었다(박영준 2015, 215). 이외에도 육상자위대와 육군은 2001년부터 서부방면대와 제2군사령부 사이에 부대지휘관이 상호 방문하고 있으며 해상자위대와 해군은 1994년부터 함정이 상호 방문하고, 수색구조 공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항공자위대와 공군은 2000년부터 항공기 상호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작전부대 간 공동훈련의 실시와 병행하여 한일은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정보교환을 위한 핫라인 설치를 추진하였다. 1999년 5월, 한일 양국은 국방부와 방위청 간, 해군작전사령부와 해상자위대 막료감부 간, 공군작전사령부와 항공자위대 막료감부 간에 핫라인을 구축하였다(박영준 2015, 215).

한일은 군령권을 직접 관할하는 합동참모본부와 통합막료회의의 간 협의체를 설치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1999년부터 합참 전략기획부장과 통합막료회의의 관련 부장과의 회의체가 정례화되었다(박영준 2015, 215). 1994년 이후 매년 국장 및 심의관급의 방위실무자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1998년 이후는 외교 당국을 포함한 안보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한일 방위실무자대화에서는 동아시아 정세, 양국의 방위정책, 국제평화협력활동에 대한 대응, 한일 방위 교류 등을 의견 교환한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는 양국을 둘러싼 안보환경과 안보정책 등을 의견 교환한다. 또한 통합막료감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 자위대와 육해군 간에도 활발한 대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유학생 파견 및 접수와 연구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 김대중 정부는 한일 간 장관급 회담을 시작으로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급 회의체, 국방부 정책국장급 회의체, 합참 전략기획부장급 회의체, 각군 부대 간 교류와 공동작전 실시, 국방 및 외교 관련 연구 및 교육기관 간의 학술교류 등이 정례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박영준 2015, 216).

이와 같은 한일 간 안보협력의 추진은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한일관계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위협을 중대하게 인식한 일본의 요구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일본측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이상봉 2001, 87).

2. 다자간 안보협력과 국제협력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한일관계를 양국관계의 틀을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국제관계 속에서 재정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즉 한일관계를 보다 광범위한 관계 속에서 재구성하게 됨으로써 보다 유연한 입장에서 양국의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일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새로운 협력체제 구축, 특히 양국을 포함하는 다자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五百旗頭 2001, 254).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은 냉전 후 세계에서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사회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양국이 서로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먼저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은 한미일 3자 구도에 기반한 협력을 추구하였다. 1995년 3월 설립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1999년 5월 시작된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6자회담은 한미일 협력과 한일 협력을 다자간으로 제도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걸프전 당시 ‘수표책 외교’로 비판받았던 국제 공헌을 위한 대외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특히 유엔을 통한 국제평화유지활동(PKO)은 평화헌법 9조와 미일 안보조약이라는 냉전 구도가 낳은 ‘뒤틀림’ 속에 일본이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가장 수월하게 국제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었다(添谷 2017). 이러한 점에서 한일 양국이 동시에 PKO 활동을 하고 있는 동티모르에서 2002년 한일 PKO 협력을 실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³⁾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2001년에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일본 오부치 수장과 중국 총리가 참가한 가운데 최초의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경제, 환경, 마약, 테러 등 비전통 안보분야에서 3국이 공동으로 협력하자는 합의를 이루었다(박영준 2015, 217).

아직 한일 간에 과거사를 둘러싼 앙금이 남아있고, 특히 한국 국민들이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거부감이 강한 지금 상황에서 국제협력주의에 기반한 한일 PKO 협력, 그리고 비전통적 안보 영역에 대한 협력은 한일 안보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다.⁴⁾

3) 2013년 12월 남수단에서 PKO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육상자위대는 한국군 ‘한빛부대’에 탄약 지원을 하였다.

4) 2019년 한일관계는 기존에 과거사 분야에서 갈등을 빚었던 상황에서 그 동안 협력관계

이와 같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의 한일 관계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양국의 이니셔티브와 증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자간 안보협력과 국제협력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3. 평가

한일 간 안보협력은 1998년 신가이드라인이 책정되면서 일본이 주일미군의 극동 지역 전개 시 후방지원을 가능하게 했던 ‘미일동맹의 재정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은 주일미군의 후방지원까지 확대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한일 간 안보협력, 특히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특히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 한일 간 안보협력의 ‘제도화’는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일본의 협력과 이해를 얻어내었고,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책공조 등 다양한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만들었다(박영준 2015, 216).

또한 한미동맹 재정의로 한반도 지역 내로 한정되었던 한미동맹은 동북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격상되어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전개가 가능해지면서 한국군의 지원 및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 지역에서의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2002년 동티모르에서 한일 PKO 협력, 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⁵⁾은 미일동맹 재정의 및 한미동맹 재정의 차원에서 한일 안보협력 강화의 상징적인 성과물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주장했던 한국과의 사전협의 없는 북일 관계의 진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부하고,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와 상관없이 일본과 북한이 관계를 개선하도록 장려하였다.⁶⁾ 결국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관계

에 있던 경제, 안보 분야까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일 간 안보협력은 글로벌, 지역적 차원에서 중요하며, 국민감정을 생각했을 때 국제협력주의에 바탕을 둔 비전통적 안보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5) 2011년 이후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같은 구체적 군사협력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한일 양국은 2016년 11월 GSOMIA를 체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한미일 3국의 공동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6) 김아름은 고이즈미 총리 시절 일본의 대북 접근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에 기반한 ‘관여’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북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한일 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고이즈미 총리에게 북일 정상회담을 권하면서 대북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관여는 북일 협상 진전의 근본

개선 및 화해 분위기는 일본의 대북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2002년 9월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총리의 평양 방문 성사와 함께 '평양선언'의 채택을 이끌어냈다. '평양선언'은 향후 북일 국교정상화의 진전을 위한 북일 간 걸림돌을 인정하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김대중은 기본적으로 동북아 질서를 경쟁적인 것으로 이해하였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치가 한국을 주변 강대국들이 경쟁하는 장으로 만들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김대중의 지역 인식은 동북아시아에서 지역안보협력의 추구로 구체화되었고 그 출발점은 남북관계의 개선이었다. 즉 김대중의 인식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곧 동아시아 평화 체제 구축 기여라는 선순환 구조에 대한 신념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일본과 합동군사훈련을 건국 이래 처음 시행하였던 것은 한일 관계의 신뢰 수준을 단숨에 높은 단계로 올려놓았다. 이러한 일본과의 협력 아래 1990년대말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과 지역주의를 주도적으로 움직이는데 성공하였다. 즉 김대중 정부의 외교적 활동이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반 실패를 거듭하던 동아시아의 '정체된 지역주의'에 일종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박명림·지상현 2009, 160).

IV. 나오며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진전을 보았던 시기는 박정희 정부의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와 김대중 정부의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자가 외교·경제 관계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면, 후자는 안보 협력의 측면에서 커다란 진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橋本 1999, 212). 또한 양 시기 모두 국제정세의 흐름이 한일 간에 안보 협력 접근을 촉진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1998년 성립된 김대중 정부의 새로운 대일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 자신의 대일 인식과 북한 핵위기로 촉발된 한반도 정세의 변화, 그리고 탈냉전 이후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의 변화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다. 특히 탈냉전 이후

적인 요인인 '일본의 북일 협상에 대한 인식 및 협상 추진 방식'과 '북한의 대일 정책 및 협상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한다(김아름 2017).

에도 국민 감정상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북한 위협은 한일 양국의 안보 관련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들에게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러한 생각은 김대중 정부 탄생 이전에도 한일포럼을 비롯한 한일 정책 커뮤니티에서 논의되었고, 합의된 사항은 양국 정부에게도 제언 형태로 제출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한일 안보협력 분야를 포함시켰다.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안보협력 분야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한일 간 안보협력을 위한 ‘신뢰’ 구축과 이에 기반한 한일 협력의 ‘제도화’ 추구였다. 한일 간 핫라인 설치와 정례 대화 실시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한일 간 안보분야에서의 다자주의와 비전통 안보, 국제협력은 한일 양국 간에 한국의 대일 감정과 일본의 평화헌법이라는 국내제약 요인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진행 가능한 분야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재 안보 측면에서 한일 정부는 전쟁 억지, 비핵 및 미사일 비확산, 지역 안정 등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한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를 강조하고,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및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 그리고 지역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일 간에는 우선 순위와 궁극적 목표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부상하는 중국 문제 등 지역 안정 차원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궁극적인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의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대일 안보 협력은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한일 안보 협력의 신뢰 구축과 제도화가 필요하다. 1969년 사토-니슨 공동선언을 통해 발표된 ‘한국조항’은 “한국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에 있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한일은 미국이라는 공통의 동맹국을 갖고 있으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간의 안보 협력에 대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한국은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인정한 전후 일본의 평화국가로서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최근 일본의 안보 역할의 확대를 인정해야 한다. 단순히 군사대국화, 군국주의 부활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예

를 들어 한반도 유사시 미군 활동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활동을 맹목적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속에서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에 대해 한일 간에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한일 간에 평시에 대화 채널 구축 및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제의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

둘째, 다자주의 안보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국정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8년에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로 이전까지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긴장이 최고조로 이른 상태를 벗어나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추구하는 기운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이 참가하는 다자주의 형태의 안보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지역에서는 과거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개최된 경험이 있고, 아세안 국가를 포함하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과 같은 다자주의 안보 협력의 경험도 존재한다. 향후 한일이 협력하는 다자주의 안보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일이 '중견국(middle power) 외교' 협력을 통해 다자주의 안보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다자주의 안보에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이 중심이 된 중견국이 강대국에 일정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역할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의 다자주의 안보가 아닌 중국을 포함하는 다자주의 안보 형태가 필요하다. 또한 다자주의 안보 협력은 군비 통제와 같은 전통적 안보뿐만 아니라 테러, 재해, 사이버 안보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를 포함하는 보다 확대된 의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전통 안보 분야 등 국제협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명목 하에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국제공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한 갈등 상황이 계속되면서 한일 간에 필요한 안보 교류 및 협력에 많은 제한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간에 전통적 안보 차원의 교류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 교류 및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과 안보 협력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인도 지원 및 재해 구조 등의 비전통적 교류 확대를 통해 다소나마 한일 간 안보 협력에 대한 저항감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간 교류 확대도 중요하지만, 한일 모두의 동맹국으로 기능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3국의 비전통적 안보 교류 및 확대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아름. 2017. “김대중 정권의 ‘대북 포용 정책’과 ‘북일 관계 개선’의 상관 관계.” 『통일연구』 21(2), 161-206.
- 류상영. 2011. “김대중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전략: 주요 저작과 어록을 통해 본 인식의 진화와 정치적 선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1), 131-168.
- 박명림, 지상현. 2009. “탈냉전기 한국의 동아시아 인식과 구상: 김대중 사례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3(4), 151-174.
- 박영준. 2015. “한국 외교와 한일 안보관계의 변용(1965~2015).” 이원덕, 기미야 다다시 외 지음. 『한일관계사 1965-2015: 1. 정치』. 서울: 역사공간.
- 유석열. 1997. 『북일관계의 현상 및 전망과 한국의 대응』.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이상봉. 2001. “냉전 후 한일관계의 특징과 과제: 구조적 요인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17, 69-95.
- 이성환. 2003. “한일 안보협력과 다자간 협력체제.” 『국제학논총』 8, 273-293.
- 조세영. 2014.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최희식. 2016. 『전후 한일관계 70년: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극복해 왔나?』. 서울: 선인.
- 五百旗頭真. 2001. 『戦後日本外交史』. 東京: 有斐閣アルマ.
- 富樫あゆみ. 2017. 『日韓安全保障協力の検証: 冷戦以後の「脅威」をめぐる力学』. 東京: 亜紀書房.
- 添谷芳秀. 2017. 『日本の外交: 「戦後」を読みとく』. 東京: ちくま学芸文庫.
- 橋本光平. 1999. 『日本の外交政策決定要因』. 京都: PHP研究所.
- 「21世紀日本の構想」懇談会. 2000. 『日本のプロンティアは日本の中にある』. 東京: 講談社.
- “韓日 군사협력의 양면성.” 『동아일보』 1999/01/09.
- 榊原智. 1995. “防衛協力で緊密化 衛藤長官が訪韓の成果.” 『産経新聞』 (9월 24일).
- “日韓, PKOで極秘協議 防衛協力を緊密化へ.” 『産経新聞』 1995/09/26.
- 星浩. 1997. “北朝鮮対応で9日に協議へ 日米韓, 局長級.” 『朝日新聞』 (6월 7일, 석간).

Abstract

Joint Declaration of Korea-Japan Partnership and Security Cooperation

Lee, Kitae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e Kim Dae-Jung government's policy towards Japan, inaugurated in 1998, reflected collectively his perception of Japan, and changes both in the politic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riggered by North Korea's nuclear crisis and in U.S. security policy towards Northeast Asia after the Cold War. In a situation where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was difficult because of strong resentment, the North's threat made security-related decision-makers and experts feel the urgent need for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ince the inauguration of Kim Dae-Jung, he has sought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a strategic perspective to cove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Joint Declaration of a New Korea-Japan Partnership for the 21st Century. The key features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partnership are 'trust-building'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bilateral cooperation based on trust. Considering Korea's resentment towards Japan and the constraints of Japan's pacifist Constitution, it is worthwhile that the partnership has been focused on the practically applicable fields of multilateralism, non-traditional secur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rsue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while upholding the partnership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build trust and institutionalize for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Second,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hould be pursued. Thir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non-traditional security should be focused on.

Key Words: Kim Dae-Jung, the Joint Declaration of a New Korea-Japan Partnership for the 21st Century,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Trust-Building,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Japan Cooperation

